

AI 특화 시범도시 Q&A

- ◇ 본 사업은 공공이 AI 인프라, 데이터, 규제특례 등을 갖춘 AI 테스트베드를 신속하게 구축하고, 민간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도시공간에서 AI 기술을 개발·실증하려는 취지
- ◇ 이번 공모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국가사업을 함께할 지방정부 파트너를 구하려는 것으로, 예산·사업체계 등 미확정 사항은 지방정부와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임

□ 재원 및 투자계획

Q1. 국비 지원 시 재원조달 구조는 '중앙→광역→기초' 또는 '중앙→기초' 등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

☞ 국비 지원은 '중앙→광역→기초'로 교부될 예정이며, 현재 회계계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.

Q2. 선정 지방정부 대상 국비 지원 상한액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요?

☞ 국비 지원 상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수립 후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.

Q3. 현물 투자 인정시 산정기준 및 증빙방식은 무엇인가요?

☞ 현물 투자는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, 기존 부지·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인정 필요 사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또, 본 공모는 획일화된 현물 산정기준 및 증빙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, 부지 제공이나 라이선스 등 투입 가능한 현물의 상세내역을 자율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4. 총사업비 관련하여 기준점이 없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어떤 식으로 평가를 진행 예정인가요?

☞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업 제안서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.

□ 컨소시엄 및 사업추진구조

Q1. 선정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이 가능한가요?

☞ 컨소시엄 구성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다만, 사업 구상의 구체화 또는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Q2. 컨소시엄 외 기관의 실증참여가 가능한가요?

☞ 컨소시엄 외 기관도 실증에 참여할 수 있으나, 실증 관련 AI인프라 사용 권한이나 국가의 행정·재정적 지원은 컨소시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

Q3. 광역시·도와 시·군·구가 함께 참여시 공모신청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?

☞ 공동 응모 시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 간 협의로 정하되,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방정부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광역시·도가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와 함께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신청 주체를 기초 지방정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공간 및 인프라구축

Q1. 우선지구는 단일구역으로 구성해야 하는가요? 도시지능센터, AI빌리지는 반드시 우선지구 내에 위치해야 하나요?

☞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실증을 집중하기 위한 우선지구의 취지를 고려해 우선지구를 구상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2. 도시지능센터 구축 주체는 지방정부인가요, 중앙기관인가요?

☞ 도시지능센터 구축은 국가 직접 사업으로 검토 중이나, 기본구상 수립 시 재정 당국,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.(기존 인프라 연계 등)

Q3. AI빌리지 규모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?

☞ 별도 제한, 권장 규모는 없습니다. 지방정부에서 기획 중인 AI 특화 서비스 실증 계획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자율 설정하시면 됩니다.

□ 서비스 · 데이터 및 규제

Q1. AI빌리지는 단기체류형 운영도 가능한가요?
☞ 별도 제한은 없으나, AI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수행한다는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Q2. 광역데이터허브와 연계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?
☞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생성·수집한 데이터를 지방정부가 직접 광역 데이터 허브로 업로드하는 수준(실시간/주기적/비주기적/미구축)을 뜻합니다.
Q3.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 및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☞ 본 사업은 특정 서비스 및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일반적인 규제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특정 구역(우선지구 등)을 대상으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4. 데이터 표준화 계획 및 실적 산정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☞ 최근 5년간 지방정부의 도시서비스 등 시스템을 연계할 때 필요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거나 문서화한 계획 여부가 기준입니다.

□ 공모평가 및 향후계획

Q1. 발표평가 시 민간기업 발표 가능 여부 문의 및 2차 발표평가 운영기준은 사전 안내되나요?
☞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발표하고, 필요 시 민간기업 등은 배석을 통해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. 또, 접수 마감 전 발표평가 일정 및 운영기준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.
Q2. 제안서 40쪽 초과 시 불이익이 있나요?
☞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안서 본문은 A4 4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. 단, 정량지표 조사서 증빙이나 협약서 등 기타 증빙 자료는 본문 분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한 없이 이어서 제책하실 수 있습니다.
Q3. 사업계획변경 및 단계적조정이 가능한가요?
☞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 구상의 구체화 또는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Q4. 실증완료 솔루션의 확산지원 계획이 있나요?

☞ 네, 실증이 완료된 우수 솔루션은 AI 시티를 대표하는 솔루션 모델로 삼아 국내·외로 적극 확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